

「상생 ·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」

2020년도 한국가스기술공사 갑질 근절 대책

2020. 1.



한국가스기술공사

I 추진배경

- (갑질 및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) 직장 내 괴롭힘, 성범죄,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
⇒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의 책임(윤리성, 신뢰성) 필요
- (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정책 기조) 상생협력, 공정,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이 정부 주요 과제
⇒ 공공성,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방식 전환 요구
- (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 개편) 상생협력, 윤리경영 등 관련 평가지표 신설 및 배점 확대
⇒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

II 추진방향

- (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적극 이행) 불공정 규정 정비, 내부 신고센터 확대 운영 및 피해자 보호 강화
⇒ 내부규정, 지침, 특수조건 등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요인 발굴 및 개선
- (갑질 근절에 대한 행동 및 인식 변화) 직원 채용 시 갑질인식 평가, 징계처분 강화 및 내용 공개
⇒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, 관리자의 은폐·피해자 보호 소홀 등 강력 처벌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반영
- (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및 변화 필요)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의 관심 및 의지 유도
⇒ 대내외 소통 활성화 및 피드백 강화, 민원사례 분석 등을 통한 갑질실태 조사

□ 내부규정, 특수조건 등 갑질 유발 요인 발굴 및 제도 개선

- (사규 등 제 규정 갑질 유발 요인 점검) 사규, 지침, 기준, 특수조건 등 제 규정에 대한 갑질 유발 조항 존재 여부 점검
- (갑질 행위자 처벌 강화)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갑질 행위자 엄중 처벌로 재발 방지
- (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) 신고자의 정보,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등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강화

□ 내부고발·익명신고센터 운영 강화 및 전담조직 신설

- (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 강화) 갑질 피해 신고·지원센터 운영 강화로 신속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
- (내부고발센터 확대 운영 등) 공익신고제도 홍보 및 내부고발센터 확대 운영 ⇒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추가
- (전담조직 설치) 감사실 직무감찰팀 신설 운영으로 인한 갑질 행위 등 상시 감독·관리 강화로 사전 예방
- (홈페이지 신고시스템 운영) 공사 홈페이지에 갑질 피해자를 위한 상담·제보시스템 설치, 운영으로 홍보 강화

□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
- (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) 갑질 관련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등을 통한 실질적 제도 마련
- (청렴옴부즈만 활용도 제고) 갑질 신고사항에 대한 자문, 대처 방안 제시 등 외부전문가 활용도 제고
- (자체 가이드라인 제정) 갑질 신고사항에 대한 자문, 대처 방안 제시 등 외부전문가 활용도 제고
- (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평가) 직원 채용 면접 시 갑질 및 상호 존중, 배려에 대한 의식 평가

□ 상생 · 협력의 공정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

- (갑질 근절에 대한 인식 제고) 전 임직원 대상 갑질 근절 교육 시행 및 사례 게시를 통한 인식 변화 유도
- (갑질 근절 다짐대회 개최)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전 임직원 다짐대회 개최(서약서 서명 등)
- (서로 존중의 날 운영 활성화) “서로 존중의 날”(매월 10일) 운영 활성화를 통한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

□ 적극적이고 엄정한 가해자 처벌

- (적극적 수사 의뢰) 갑질 신고 · 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사법 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

<예시> · 금품·향응 수수, 채용비리,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
 · 폭행·협박·모욕·성희롱 등이 반복적·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
 · 갑질로 인하여 사망, 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

- (관리자 등 책임 문책)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·상급자가 갑질 은폐,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징계 강화
- (징계 감경사유 배제) 악의적·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 감경 사유 적용 배제

□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철저

- (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)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,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 보호 철저
- (2차 피해 예방 및 조치) 피해자·신고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인 시 신변 보호 등 철저한 보호조치 강구
- (기관장의 보호 조치) 피해자 희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(인사조치 등), 피해자 조력인(피해자 지명 동료·상사) 지정

IV 향후 추진계획

- 자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홍보
-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대상 갑질 근절 홍보 강화 및 만족도 조사
- 추진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 분석·평가를 통한 피드백 강화